I 서론

최근 몇 년간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보험사기'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기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조 818억 원에 달하였다(전년 대비 14.7% 증가).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1)]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아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 범죄를 유발하고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허위 입원,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의 폐해를 고려하면 보험사기의 감축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본고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실효적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제까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항목으로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보험사기 관련 처벌 현황 등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

1) 한편, 2023년 7월 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해당 의결 내용을 토대로 정무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순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선 2장과 3장에서는 일반론으로서 보험사기에 대한 개요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포함하여 보험사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규 및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4장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실제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매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적발된 이후에 실제로 보험사기죄(정확한 명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보험사기죄'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로 함)로 처벌되는 현황 등은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보험사기죄에 대한 실제 검찰에서의 처분 현황 및 형사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은 어떠한지 조사해보고, 아울러 판례에 기초한 실제 보험사기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어 5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보험사기 현황 및 사례에 기초하여 보험사기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